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변안전 취약구역
구명환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검 토 보 고 서**

<제203회 임시회>

2011. 10. 21.

달 성 군 의 회
전문위원 서 점 태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변안전 취약구역 구명환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1년 10월 7일

2. 제 출 자 : 채명지 의원(대표발의)

3. 제정이유

- 우리군 소재 수변 안전 취약구역의 구명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변 지역에서 예측되는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달성군 수변 안전 취약구역의 구명환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 수변지역에 구명환을 설치하여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나. 수변안전대책 수립 및 취약구역의 지정(안 제3조)

- 군수는 매년 1회 수변 안전대책을 수립하면서 수변 안전 취약 구역을 지정하여야 함.

다. 구명환 등의 설치 및 관리(안 제4조)

- 군수는 수변안전 취약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 및 구명환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라. 수변안전대책 집중기간 운영(안 제5조)

- 집중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함.

5.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변 안전 취약구역 구명환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 제정안의 취지

- 수변 지역의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수변안전 취약구역을 지정하여 안전대책 집중기간을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2. 제정안 타당성 검토

- 달성군은 지역 특성상 낙동강, 금호강 등 강변지역과 산간, 계곡 등이 많으므로 수변안전 취약구역을 지정·관리함으로써,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변 안전 취약구역 구명환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재 수변 안전 취약구역의 구명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변 지역에서 예측되는 불의의 사고로부터 주민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수변 안전 취약구역”이라 함은 낙동강, 금호강, 하천, 수리시설물(저수지, 양수장 등)에서 물놀이, 낚시, 산책 등 이용자의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예측되는 지역을 말한다.
- ② “구명환”이란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수 있도록 로프에 연결된 구조장비를 말한다.

제3조(수변 안전대책 수립 및 취약구역의 지정) 군수는 매년 1회 수변 안전대책을 수립하면서 수변 안전 취약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구명환 등의 설치 및 관리) 군수는 수변 안전 취약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 및 구명환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수변 안전대책 집중기간 운영) ① 수변 안전대책의 집중기간을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 이 기간은 수변 안전 취약구역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 집중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관계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재난을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1년 10월 7일

2. 제 출 자 : 김옥순 의원(대표발의)

3.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실명제를 도입하고, 본회의 심사대상인 조례안을 예고할 경우 그 방법과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조례안 실명제 도입(안 제19조제2항)

-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위원을 구분, 해당 조례안의 부제로 발의위원의 성명을 기재

나. 조례안 예고제 신설(안 제20조의2)

-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주요내용·전문 등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예고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66조(의안의 발의) 및 제66조의2(조례안 예고)
-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 개정안의 취지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실명제를 시행하고, 조례안을 예고함으로써 의원발의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개정안 타당성 검토

-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명시·구분함으로써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5일간의 조례안 예고기간을 둠으로써 의회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1) 규칙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위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주요 내용·전문 등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5일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군수가 조례안을 제출하기 전 이미 입법예고를 한 경우
3.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예고가 곤란한 경우
4.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5.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6.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예고를 할 때에는 의장의 명의로 하되, 의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안예고의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발의된 조례안부터 적용한다.

붙임 2)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제19조 ① ----- ----- ----- ----- ----- -----.
<신설>	②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제20조의2(조례안 예고) ①의장은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주요 내용·전문 등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5일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현행	개정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u> 2. <u>군수가 조례안을 제출하기 전 이미 입법예고를 한 경우</u> 3. <u>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예고가 곤란한 경우</u> 4. <u>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u> 5. <u>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u> 6. <u>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u> <p>② 제1항에 의하여 예고를 할 때에는 의장의 명의로 하되, 의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p>

붙임 3)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6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위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위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4>

⑤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제66조의2(조례안예고) ①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② 조례안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14]

[행정절차법]

제41조 (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1.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삭제 <2002.12.30>

③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④입법예고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1년 10월 7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기획감사실)

3. 개정 이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승진 임용과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직렬 기능직 인력을 일반직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함에 따라 직렬·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일반직 613명 (종전 608명, 7급 +2, 8급 +3) (증 5)

나. 기능직 55명 (종전 60명, 7급 -2, 8급 -3) (감 5)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제30조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 개정안의 취지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사무직렬 기능직 인력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단계적으로 직렬, 직급 등을 조정하고자 함.

2. 개정안 타당성 검토

-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함으로써,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조직 내의 화합과 소통으로
조직의 활력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음.

※ 달성군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은 21명으로
일반직 전환 희망자수는 19명이며 (2명은 포기)
2011년 5명 등 연차적으로 전환 예정임 (2013년까지)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관계법령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별표2,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 표 1 】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일 반 직	기능직 · 고용직	별정직 · 정무직
비 율	90% 이상	8% 이내	2% 이내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 · 지도직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읍 · 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 별 표 2 】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 이내	6% 이내	28% 이내	31% 이내	26% 이내	8% 이상

비 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기능직 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 율	4% 이내	22% 이내	31% 이내	28% 이내	15% 이상

비 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구 분	연 구 직		지 도 직	
	연 구 관	연 구 사	지 도 관	지 도 사
비 율	3% 이내	97% 이상	8% 이내	92% 이상

비 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4. 별정직 공무원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	100%	-	-	-

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채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 별 표 3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 및 그 출장소	면
총 계	706	404	13	99	13	81	96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613	373	9	61	10	74	86
3급	1	1					
4급	4	3		1			
5급	35	20	3	2	1	3	6
6급이하 계	573	349	6	58	9	71	80
별정직 계	11	1		10			
5급상당							
6급상당 이하 계	11	1		10			
연구직 계	2	2					
연 구 관							
연 구 사	2	2					
지도직 계	24			24			
지 도 관	2			2			
지 도 사	22			22			
기능직 계	55	27	4	4	3	7	10

붙임 2)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1)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제1항관련)				(별표1)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제1항관련)			
구분	일반직	기능직 · 고용직	별정직 · 정무직	구분	일반직	기능직 · 고용직	별정직 · 정무직
비율	89% 이상	9% 이내	2% 이내	비율	90% 이상	8% 이내	2% 이내

현행							개정안						
(별표2)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제3조제2항관련)							(별표2)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제3조제2항관련)						
1. 일반직 공무원							1. 일반직 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 이내	6% 이내	28% 이내	31% 이내	<u>25%</u> 이내	9% 이상	비율	1% 이내	6% 이내	28% 이내	31% 이내	<u>26%</u> 이내	8% 이상
비고: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비고: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기능직공무원							2. 기능직공무원						
구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구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율	4% 이내	<u>20%</u> 이내	<u>35%</u> 이내	<u>31%</u> 이내	<u>10%</u> 이상		비율	4% 이내	<u>22%</u> 이내	<u>31%</u> 이내	<u>28%</u> 이내	<u>15%</u> 이상	
비고: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비고: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3.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3% 이내	97% 이상	8% 이내	92% 이상			비율	3% 이내	97% 이상	8% 이내	92% 이상		
비고: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비고: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4. 별정직 공무원							4. 별정직 공무원						
구분	5급상 당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구분	5급상 당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율	-	100%	-	-	-		비율	-	100%	-	-	-	
비고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현행								개정안							
(별표3)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관련)								(별표3)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관련)							
구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및 그 출장소	면	구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및 그 출장소	면
총계	706	404	13	99	13	81	96	총계	706	404	13	99	13	81	96
정무직계	1	1						정무직계	1	1					
군수	1	1						군수	1	1					
일반직계	608	371	9	60	10	73	85	일반직계	613	373	9	61	10	74	86
3급	1	1						3급	1	1					
4급	4	3		1				4급	4	3		1			
5급	35	20	3	2	1	3	6	5급	35	20	3	2	1	3	6
6급이하계	568	347	6	57	9	70	79	6급이하계	573	349	6	58	9	71	80
별정직계	11	1		10				별정직계	11	1		10			
5급상당								5급상당							
6급상당 이하계	11	1		10				6급상당 이하계	11	1		10			
연구직계	2	2						연구직계	2	2					
연구관								연구관							
연구사	2	2						연구사	2	2					
지도직계	24			24				지도직계	24			24			
지도관	2			2				지도관	2			2			
지도사	22			22				지도사	22			22			
기능직계	60	29	4	5	3	8	11	기능직계	55	27	4	4	3	7	10

붙임 3)

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1년 10월 7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기획감사실)
3.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이 신설(2011.7.14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비용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의안의 비용추계에 대한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 나. 군수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비용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비용추계서 작성대상에 대하여 규정(안 제3조)
- 다. 비용추계의 작성방법 및 재원조달방안, 제출시기 등을 규정(안 제4조 ~ 제6조)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 제정안의 취지

- 지방자치법 제66조3이 신설(2011.07.14공포)됨에 따라 위임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제정안 타당성 검토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비용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 작성 및 재원조달방안, 제출시기 등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작성대상) ① 군수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작성한다.

③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청구인은 비용추계서

를 작성하여 조례안에 첨부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이 곤란한 경우

제4조(작성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중앙부처에서 발행하는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군수는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할 때 해당 의안

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세입 및 세출 업무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조례·규칙 심의회”라 한다) 상정시 조례안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소관 부서에서는 제3조에 따른 비용추계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 비용 추계서

1. 사업개요

가.

나.

2. 비용 발생 요인

3. 관련조문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나. 추계 결과

다. 재원조달방안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붙임

6. 작성자 : △△국 △△과장 △△ 담당

(전문기관 : △△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년)	2차년도 (년)	3차년도 (년)	4차년도 (년)	5차년도 (년)	계
세 입							
△△△△ △△△△ △△△△							
세 출							
△△△△ △△△△ △△△△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구비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붙임 2)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1년 10월 7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주민지원과)

3. 개정이유

-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들의 참전명예수당 균등지급을 위해 대구광역시에서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시 조례와의 형평성 유지 및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관련 우리 군 조례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참전명예수당 증액 및 단서조항 신설

- 참전명예수당 : 2만원 ⇒ 3만원

- 단서조항 : 대구광역시 조례에 의거 참전명예수당 수령 시
미지급

나. 사망위로금 증액 : 15만원 ⇒ 30만원

5. 관계법령

-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 개정안의 취지

-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2011.10월)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의 참전명예수당 등 지원액을 대구시 조례와 균등하게 개정하고자 함.

2. 개정안 타당성 검토

- 대구시 조례 지원액(70세 이상, 월 3만원)과, 달성군 조례 지원액(65세 이상, 월 2만원)을 3만원으로 균등하게 하고, 사망위로금을 현실화함으로써,
 -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군민의 애국심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 우리군 참전유공자는 706명(65~69세 133명, 70세 이상 573명)
(70세 이상 573명에 대한 지원액 당초 예산중 34,380,000원은 절감)
 $573\text{명} \times 20,000\text{원} \times 3\text{개월} = 34,380,000\text{원}$

-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월 20천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월 3만원의 참전명예수당”으로 한다.

제3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대구광역시 조례에 의거 참전명예수당 수령 시 미지급

제3조제2호 중 “사망위로금 150천원”을 “사망위로금 3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사업) 달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3조(지원사업) _____ _____ _____
1. 참전유공자에게 월 20천원의 참전명예 수당 지급 <단서 신설>	1. _____월3만원의 참전명예 수당 지급 단, 대구광역시 조례에 의거 참전명예수당 수령 시 미지급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위로금 150천원 지급	2. _____사망 위로금 30만원 _____

붙임 3)

관계 법령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대상은 7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

제5조(참전명예수당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 지급액은 월 3만원으로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산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1년 10월 7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경제지원과)

3. 개정 이유

-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전통산업보존구역의 확대 및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변경 및 취소에 관한 규정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달성군 행정기구의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전통산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
(안 제11조제1항)
- 나.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변경 및 취소에 관한 규정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부칙 안 제2조)
- 다.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의 위원인 군 공무원 중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5급 공무원”을 “4급 공무원”으로 변경(안 제8조제3항2호)
 라.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의 간사는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변경(안 제8조제4항)

5. 관계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 개정안의 취지

- 「유통산업 발전법」이 2011. 6. 30 개정됨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개정안 타당성 검토

-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범위를 500미터에서 1킬로미터로
 확대하여 전통상가를 보호할 수 있고,
- 대규모 점포 등 개설등록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대규모점포의 개설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대규모유통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도모
 할 수 있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2호 중 “5급 공무원” 을 “4급 공무원” 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6급 공무원” 을 “5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500미터” 를 “1킬로미터” 로 한다.

조례 제2139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 중 “2013년 11월 23일까지” 를 “2015년 11월 23일까지” 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에 따른 개설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해당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붙임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 ②(생략)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생략) 가 ~ 나 (생략) 2. 군 공무원 중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u>5급 공무원</u> 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u>6급 공무원</u> 으로 한다. ⑤ (생략)	제8조(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 1.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2.----- ----- <u>4급 공무원</u> ④----- ----- <u>5급 공무원</u>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u>500미터</u>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취소할 수 있다. 1 ~ 2 (생략) ②~③ (생략)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 ----- ----- <u>1킬로미터</u> ----- ----- 1 ~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조례 제2139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조례 제2139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9조제5호, 제6호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u>2013년 11월 23일까지</u> 효력을 가진다.	제2조(유효기간)----- ----- ----- <u>2015년 11월 23일까지</u> ----- -----.

붙임 3)

관계 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11.24]

[법률 제10398호(2010.11.24)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5년 11월 23일까지 유효함]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1년 10월 7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치수방재과)

3. 개정 이유

-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운용의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의 의무 예치율이 “100분의 30이상”에서 “100분의 15이상”으로 조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2011. 6. 27.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당초 30%에서 15%로 하향 조정됨.

(안 제3조)

나. 법 조항 변경 및 법령 개정(삭제)에 따른 조례 개정(안 제4조)

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가 삭제됨에 따라 재난 관리 기금의 용도를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

(안 제6조)

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5.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 개정안의 취지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2011. 6. 27.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

2. 개정안 타당성 검토

- 재난관리기금 예치율을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15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기금 적립금 부담이 줄어 들었으며,
(기금 : 37억원정도, 30% : 13억6천만원, 15% : 6억8천만원정도)
-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를 달성군 조례로 정함으로써, 우리 지역 실정에 적합하게 기금을 운용·관리할 수 있어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의한 적립금
2.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수입

제2조제3호 중 “기타”를 “ 그 밖의”로 한다.

제3조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30”을 “15”로, “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를 “해당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지정금고(「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정금고(「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5조 및 은행법 제5조”를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및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를 “(해당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해당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을 “해당년도사용기금액”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를 “영 제74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나.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 구입, 장비 등의 사용

다.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

라. 재난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재난대응대비 훈련

마.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주민지원, 장비 등의 사용

바.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보강

7.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나 긴급한 조치

8. 지방자치단체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긴급구조기관이나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수행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나 물자 등을 구입하는 용도)

9. 법 제40조부터 제42조에 따른 대피명령이나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

10. 재난의 원인분석과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11. 지진가속도 및 급경사지 계측시설

12. 법 제3조제1호 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용자 등) ① 자치단체는 영 제74

조 제1항 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들은 실제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에 따라 대피하거나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용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용된 재난관리기금————— ————— ————— —————.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등	제2조(기금의 조성) ————— —————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의한 적립금 2.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군수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 ————— ————— ————— ————— 제2항— ————— 15 ————— ————— ————— ————— “해당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 ————— —————.

<p>제4조(장기에치기금액의 예치·관리) <u>장기에치기금액은 지정금고(「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함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5조 및 은행법 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u></p> <p>제5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u>당해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u></p> <p>②<u>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u></p> <p>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 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p> <p>1. ~ 4. (생략)</p>	<p>제4조(장기에치기금액의 예치·관리) <u>----- 지정금고(「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u> <u>-----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및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u></p> <p>제5조(해당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u>해당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라 -----</u> <u>-----.</u></p> <p>②<u>해당년도사용기금액-----</u> <u>-----</u> <u>-----.</u></p> <p>제6조(기금의 용도) ----- <u>----- 영 제74조에 따른-----</u> <u>-----</u> <u>-----</u> <u>-----.</u></p> <p>1. ~ 4. (현행과 같음)</p>
---	---

<u><신 설></u>	<p>5.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p> <p>가. <u>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u></p> <p>나. <u>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 구입, 장비 등의 사용</u></p> <p>다. <u>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u></p> <p>라. <u>재난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재난대응대비 훈련</u></p> <p>마. <u>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주민지원, 장비 등의 사용</u></p> <p>바. <u>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u></p>
<u><신 설></u>	<p>6. <u>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재난예보·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보강</u></p>
<u><신 설></u>	<p>7. <u>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나 긴급한 조치</u></p>
<u><신 설></u>	<p>8. <u>지방자치단체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긴급구조기관이나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수행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나 물자 등을 구입하는 용도)</u></p>

<신 설>	9. 법 제40조부터 제42조에 따른 대피명령이나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
<신 설>	10. 재난의 원인분석과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신 설>	11. 지진가속도 및 급경사지 계측시설
<신 설>	12. 법 제3조제1호 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신 설>	<p>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용자 등) ① 자치단체는 영 제74조 제1항 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들은 실제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에 따라 대피하거나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용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용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용자기금 규모와 용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p> <p>③ 그 밖에 기금의 용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7조(기금의회계관리)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p>제8조(기금의회계관리)-----</p> <p>-----</p> <p>-----</p> <p>-----.</p>

제8조(회계공무원)① (생략) 1. ~ 2. (생략) ② (생략)	제9조(회계공무원)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 ④ (생략)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심의위원회의 기능)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 3. (생략)	제11조(심의위원회의 기능)----- ----- ----- 1. ~ 3. (현행과 같음)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생략) 1. ~ 4. (생략) ② ~ ③ (생략)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시행규칙)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

붙임 3)

관계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은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제74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3조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보강

다.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라.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마.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

바.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2. 법 제3조 제1호 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 삭제 <2011.6.29>

[지방재정법]

제77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나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유가증권의 관리) ④법 제9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15>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외국은행을 제외한다)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삭제 <2009.3.25>

[은행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은행"이란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경영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